



법제처, 자치법제 발전 협의회 개최

학계와 현장의 소리를 아울러 자치법제 발전의 계기 마련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학교수, 연구원, 지방자치 관련 단체 및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제 적법성 제고방안 등에 대해 학계와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자치법제 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시립대학교 문상덕 교수, 목포대학교 김도승 교수를 비롯한 학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이성재 회장을 비롯한 지방자치 관련 단체,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실장 등 연구원,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 재정정책과 등 자치법규 담당 중앙부서, 충청남도 등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들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자치법제 협업센터 등 자치법제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회는 자치법제 관련 법리적 쟁점 연구, 자치법규 의견제시 및 자율정비 자문, 워크숍 등을 통해 자치법제 관련 전문가와 실무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자치법제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해 구성되었다.

이날 회의는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방안'과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보조금 지원 조례의 제정 동향과 과제'라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주제별 주요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주제에서는 지방과 중앙을 나누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책형성단계에서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 제도화, 자치법규 담당자에 대한 법률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조례 관련 법령 제·개정 시 관련 사무의 자치사무 여부 명시, 자치법규 적법성 감독·지원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 역할분담 명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보조금 지출 통제와 관련해 집행 과정상의 통제 강화보다는 보조금 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의 간소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제재 또는 통제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법제처, ‘제1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개최

통일을 대비한 남북법제 통합방안 논의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통일에 대비한 남북법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2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학계와 실무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업 분야 남북법제 통합방안에 관하여 논의했다.
- ▣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는 위원장(정영조 법제지원단장)을 포함하여 남북한 법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4명), 변호사(2명), 관계 연구원(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밖에 통합법제를 논의할 국토·교통·과학기술·농업 등 행정 각 분야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 ▣ 위촉된 위원 및 전문위원은 향후 남북한 법제 통합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 법제처 남북법제 연구사업에 대한 조언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 ▣ 법제처는 1999년 남북법제 연구논문 보고서 간행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남북법제 연구사업을 시작했으며, 특히 지난 2011년에는 남북법제 연구 중장기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법 각 분야별로 연도별 세부 연구 주제를 정하여 통일에 대비한 법제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2015년부터는 ‘남북법제 연구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그동안 연구해 온 분야별 남북한 법제 통합방안을 구체화하고, 관련 이슈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법제 연구사업을 심도있게 해 나갈 예정이다.

▣ 제정부 법제처장은 통일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분단 70주년을 맞이하여 남북법제 통합방안과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심도 있고 실질적인 논의의장을 마련하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며, 통일에 대비한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남북법제 연구의 내실화를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임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위원

연번	이름	소속 & 직위	비고
1	정영조	법제처 법제지원단장	위원장
2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위원
3	박정원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위원
4	손희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위원
5	한명섭	변호사	위원
6	이찬호	미국변호사	위원
7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위원
8	송인호	한동대학교 교수	위원

법제 분야 ICT 협력을 통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

우즈베크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연수단, 법제처 방문



- ▣ 전자정부 협력을 강화를 위해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주관하는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가 중인 우즈베키스탄 정보화 분야 공무원 및 교수 13명이 12일 법제처(처장 제정부)를 방문했다.
- ▣ 이번 방문은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 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공동선언을 채택하여 상호 협력 파트너 관계를 발전시킨 데 이어,
- ... 지난 5월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대통령의 방한 시 양국 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 ▣ 법제처는 우즈베키스탄 연수단에 법제 정보화의 대표 사례인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구축 및 운영 경험을 소개하고, 법령정보시스템을 비롯한 법제 IT인프라를 주변 국가에 확산하고 공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 ...> 제정부 법제처장은 "국가법령정보센터는 PC 뿐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법령정보 검색시스템으로서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앱 어워드 코리아'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미얀마에 이를 모델로 한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내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소개하며,
 - ...> "중앙아시아의 정보통신 발전을 선도하는 우즈베키스탄의 전자정부 구축에 좋은 사례로 공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 법제처는 2009년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2013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 산하 입법조사연구소와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작년 한 해 동안 법제 분야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네차례에 걸쳐 상호 방문하는 등 우즈베키스탄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 ... 특히, 작년 10월 개최한 '제2회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 회의'에서 전자정부 법제의 현황과 발전 전략을 양국이 함께 논의하는 등 법제 ICT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 있다.
- ▣ 이번 방문을 계기로 법제처는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유라시아 각국에 법제 IT 인프라를 널리 전파하고 법제 분야 상호 교류협력을 공고히 하여 '법제한류(法制韓流)'의 확산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가속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법제처, 조례 고충 해결 위해 부안군 방문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7일 오후 전라북도 부안군청에서 '찾아가는 자치법제 지원센터'를 열었다.
- ▶ 법제처가 운영 중인 '찾아가는 자치법제 지원센터'는 지자체 조례 담당자의 접근성,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자치법규 입안 및 해석에 대한 종합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 ... 처음 제도를 도입한 2014년에는 충청남도, 아산시, 춘천시에서 총 3회 개최하였고, 2015년에는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대전 유성구, 전남 순천시 등 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 중이다.

▶ 법제처는 이번 행사에서 부안군 자치법규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정비 이론 및 사례를 소개하고, 담당자 개별면담을 통해 규제 개선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입법 컨설팅을 지원했다.

▶ 법제처 황상철 차장은 "법제처와 부안군 간의 자치법규에 관한 활발한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생거부안(生居扶安)*'이라 불리는 부안군이 앞으로도 주민이 행복하고 기업이 모여드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다양한 자치법제 지원제도를 통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생거(生居)'란 '살기 좋은 곳' 또는 '살아서 좋은 곳'이라는 의미임. '생거부안'이란 호칭은 조선 영조시대 암행어사 박문수가 "여염시조(물고기·소금·땔나무)가 풍부해 부모를 봉양하기 좋으니 '생거부안'이로다"라고 한 말에서 비롯됨